

최근 북한의 대남 경제체제 정비현황

1. 대남 경제체제 정비내용

□ 「북남경제협력법」 제정

- 북한은 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’(북한 국회에 해당)에서 「북남경제협력법」을 채택하였다고 발표(북한 내각신문 ‘민주조선’, 7.29)
 - 동 신문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,全文은 미공개
- 북한은 동법 제정의 의의를 ‘남북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담보를 마련한 것’이라고 설명
- 「북남경제협력법」 주요 내용 (총 27조로 구성)
 - 남북경협의 원칙으로 민족 전체의 이익,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, 상호 존중과 신뢰, 有無相通을 규정
 -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담당
 - ※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 역할은 금년 6월 공식 발족한 「민족경제협력위원회」가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
 -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, 협력사업의 기초·방법, 재산이용 및 보호, 노동력 채용, 사업조건 보장 등 남북경협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

□ 「민족경제협력위원회」 발족

- 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’에서 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(민경협 또는 민경위로 약칭)」를 발족하였다고 발표 (조선중앙통신, 6.22)

- 민경협(위원장 정운업)은 북한 내부결정에 따라 '04년 실제로 구성되었으며, 이번 최고 인민회의 발표를 통해 정식으로 발족한 것
- 이와 함께 내각의 경제, 무역 분야의 소장 실무전문가들을 민경협에 전진 배치
- '민경협'은 『북남경제협력법』에 규정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으로, 내각의 부처(省)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내각 직속기관으로 추정
- 기존의 남북경협 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(민경련),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(개성공단 담당), 금강산관광총회사(금강산 담당) 등을 통할하는 기구로 신규 설립
- 그러나 민경협은 실질적으로 노동당 외곽조직인 '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'(아태)가 지도·통제하는 것으로 보임
- 남한과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은 노동당 조직인 민족화해협의회(민화협)이 계속 담당
⇒ 대남사업조직이 정책총괄(아태), 경협실무(민경협), 사회문화실무(민화협)으로 체계화[참고 1, 2 북한의 대남사업기구 재정비 내용 및 현황 참조]

2. 대남 경협체제 재정비 배경

□ 북한의 남한 경제의존도 증대

- 2004년 남북교역 규모는 약 7억 달러로, 북한의 대외거래 상대국 가운데 중국(13.9억 달러)에 이어 2위를 차지

<표 1>

북한의 대외교역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	'99	'00	'01	'02	'03	'04
한 국 (A)	333	425	403	642	724	697
국 제 사 회 (B)	1,480	1,969	2,270	2,260	2,359	2,857
합 계 (A+B)	1,813	2,394	2,673	2,902	3,083	3,554
한 국 의 비 중 (%)	18.4	17.8	15.1	22.1	23.5	19.6

자료: 통일부, KOTRA

-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한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본격화되면 남북교역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
- 2004년 남한의 대북지원은 256백만 달러로, 남한은 북한의 최대 지원국
- 중국의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에 있어 남한(정부 및 민간)이 차지하는 비중은 61%로 여타국가에 비해 압도적임.

<표 2>

북한에 대한 지원 현황(중국 제외)

(단위: 백만 달러)

	'99	'00	'01	'02	'03	'04
한 국 (A)	47	114	135	135	158	256
국 제 사 회 (B)	360	182	357	258	139	163
합 계 (A+B)	407	296	492	393	297	419
한 국 의 비 중 (%)	11.6	38.5	27.5	34.0	53.0	61.0

자료: 통일부

- 북한이 남북경협과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경협 관리체제를 제도화, 체계화할 필요

□ 남북경협 관리의 효율성 제고

-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경협 담당기구를 ‘노동당 지도’와 ‘창구 단일화’ 원칙에 따라 설치·운영
 - 남북경협을 공식 정부기구에서 담당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해당기구를 신설·해체
 - 그 동안 북한에서 남북경협은 ‘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’(90년대 초반), ‘광명성경제연합회’(90년대 중반)를 거쳐 97년 이후 아태, 민경련 등의 기관이 주로 담당
- 1990년대 후반부터 남북 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아태, 민화협, 민경련 등 다수 기관이 대남 경협에 참여
 - 그 결과 기관간 업무 중복, 상호 경쟁 등으로 이권다툼, 역할혼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, 이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발생

- 나아가 핵문제 해결 이후 본격화될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남북경협의 틀을 재정비하고 대남 경협조직을 체계화할 필요

□ 당·정 역할 재정비의 일환

- 현재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당과 내각의 역할 재정비를 추진 중
 - 노동당 비서국의 경제관리담당 부서들이 축소 및 폐지되고, 박봉주 내각총리의 김정일 수행이 늘어나는 등 경제관리에 관한 내각의 역할 증대
 - 노동당 역할은 경제관련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, 정치사상 통제위주로 변화
-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당 소속의 아태가 남북관계 전반을 총괄하되, 경협실무는 민경협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

3.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

□ 북한의 남북경협 공식화, 제도화

- 그 동안 북한에서 법·제도적 기반없이 이루어졌던 남북경협이 이번 체제정비를 통해 관련 제도와 절차가 공식화, 제도화됨에 따라 남북경협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
 - 그 동안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법령에는 남북경협의 근거가 불명확
 - 개성공단, 금강산 등 경제특구를 제외한 북한 일반지역의 외국인 투자법 적용대상을 ‘외국인 및 해외 조선동포’라고 규정하여 남한기업의 적용대상 여부가 불분명
 - ※ 그 동안 남측 투자자는 개별적으로 북한 당국의 투자승인을 받아 투자를 실행
- 이번에 북한이 남한의 「남북교류협력법」과 유사한 「북남경제협력법」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향후 대북투자 등 남북경협 관련 제도와 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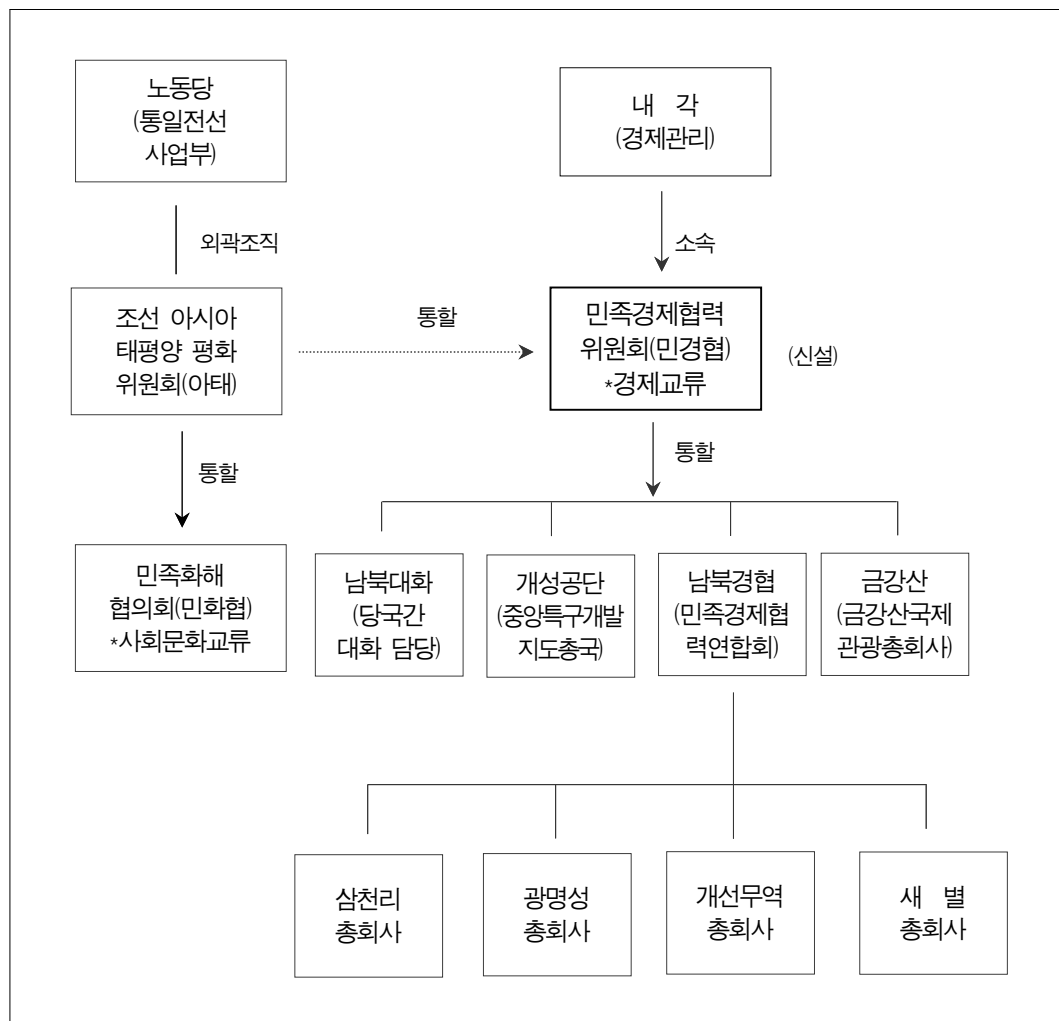
□ 남북경협 확대에 긍정적 효과

- 북한의 민경협의 전면 등장과 이로 인한 남북경협 담당 기구의 위상 제고(무역성 소속

- 민경련 → 내각 소속 민경협)로 인해,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경제논리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
- 그 동안 남북경협은 노동당이 통할하여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 적용
 - 내각 직속의 남북경협 담당기구인 민경협의 등장으로 향후 남북경협에 있어 탈 이념화, 실무화가 진전되어 남북경협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

<참고 1>

북한의 대남사업 기구 재정비 내용



* 중앙일보(05.3.3)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.

<참고 2>

북한의 대남사업기구 현황

기관명	주요 인물	특기 사항
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	부 장 : - 제1부부장 : 림동욱 부부장 : 리종혁, 김령성, 전금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내외 인사들과 통일전선 구축 ■ 직접침투과, 남북회담과, 해외담당과, 조국통일연구원 등으로 구성 ■ 김용순 전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사업부장 사후 후임자 불명
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(아태평화위)	위원장 : - 부위원장 : 림동욱, 리종혁, 김령성, 전금진 등 서기장 : 전금률 실 장 : 원동연, 황철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994. 5월 설립된 조선노동당 외곽조직 ■ 설립목적 : 아태지역 미수교국과의 교류 확대·강화 ■ 일본 등과 관계개선을 위한 창구역할, 외국인사 방북초청, 학술회의 참가 등의 역할 수행 ■ 1998 이후 현대와의 사업을 계기로 남북경협 총괄(금강산, 개성) ■ 김용순 위원장 사후 후임자 불명
민족화해협의회 (민화협)	회 장 : 김영대 부회장 : 김령성, 허혁필 등 실 장 : 백문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998. 6 8·15 통일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각계 단체 및 인사로 구성 ■ 남한 민간단체들과 연대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적 기구 ■ 하부조직이 없는 당의 전위기구
민족경제협력 위원회(민경협)	* 민경련 정운업 회장이 위원장 을 맡았다는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04. 7월 남북경협 총괄하기 위해 내각 직속 위원회(장관급)로 설립 (실제 노동당이 지도·통제) ■ 무역성, 외무성의 경제담당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
민족경제협력 연합회(민경련)	회 장 : 정운업 부회장 : 장우영, 황창길 서기장 : 김춘근 * 김춘근 서기장의 회장 승진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998년 무역성 산하기구로 조직되어 남북경협 실무담당(현재는 민경협 산하) ■ 남한기업 접촉을 위해 중국에 대표부 설치 - 단둥(오광식 대표)